

2012년 제2차 육아지원정책 포럼

일시 | 2012. 4. 17. [화] 15:00

장소 | 육아정책연구소 회의실

2012년 제2차 육아지원정책 포럼

□ 일시: 2012. 4. 17.(화) 15:00

□ 장소: 육아정책연구소 회의실

15:00~15:10 개회 및 인사말

15:10~16:10 발표

유치원 운영위원회 실태 및 개선 방안

최은영(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유치원 혼합반 현황과 과제

이윤진(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16:10~16:50 토론

안정은(교육과학기술부 장학관)

박정선(명지전문대학 교수/명지유치원장)

16:50~17:00 질의응답 및 폐회

§ 2012년 제2차 육아지원정책 포럼 §



유치원 운영위원회 실태 및 개선 방안

발표자: 최은영(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유치원 운영위원회 실태 및 개선 방안

최은영(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1. 서론

영유아기는 인적자원투자 대비 편익 비율이 가장 큰 시기이며, 이에 선진국들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체제를 개편하고 유아기에 본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유아교육을 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과정 개편과 종일반 운영 등 유아교육 서비스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적 투자와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으며, 교육계 내부에서도 초·중등 부문에 중점 지원을 함으로써 유아교육 분야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2009년 5월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질 높은 유아교육을 보편화하고자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을 결정하였다.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은 '아이가 행복한 미래형 학교'라는 비전과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 생애초기 출발점 평등 보장, 선진 유아교육 기반 마련이라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 또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유아교육 서비스 개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단계적·점진적 추진, 지원과 책무성의 조화를 세부 추진전략으로 하여, 유아학비 부담 경감,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우수 교원 배치·활용, 유아교육지원체계 강화의 5개 정책분야에 대해 각각 5개씩 총 25개 핵심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과제 중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 분야는 유치원 정보공시제도, 재무회계 규칙, 유치원 운영위원회 등을 도입하여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며,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 기회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유치원 정보공시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유치원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도입·운영하고, 이 밖에 유치원 평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유아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며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급식, 종일반 운영, 예·결산 및 학부모 부담 수혜성 경비 책정 등 유치원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운영하며,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인사 등 5~9인으로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국·공립단설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 사업' 지원 사립유치원은 의무 적용하되, 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유치원과 병

설유치원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2010년 2월에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시행(안)이 마련되어 국립 및 단설유치원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2011년 9월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국공립유치원은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심의기능을 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2011년 10월에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11년 12월에 2012학년도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을 시행하며, 2012년 3월부터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를 전면 시행하고, 법률 개정이 지연되더라도 자율적인 설치와 운영을 독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2년까지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를 목표로 2010년에는 국립유치원과 국립단설유치원에 우선 설치하여 시범 적용하며,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는 사립유치원에 우선 설치하고, 2011년에는 전임원감이 있는 병설유치원, 2012년에는 전면 실시하되, 2학급이하 병설유치원은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초·중등학교 및 어린이집에는 이미 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반면, 유치원은 운영위원회의 도입 단계이나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 사례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가. 면담 조사

유치원 운영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 교육전문직과 원장을 대상으로 집단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시기, 방법, 운영에 따른 성과 등을 살펴보았다. 면담 참여자 및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면담 참여자 및 내용

구분	참여자	내용
시·도 교육청 교육전문직 면담	16개 시도교육청 장학관 및 장학사 16인	- 유치원 운영위원회 사업의 운영 방식 및 사례
원장 집단 면담	서울, 강원, 충북, 울산, 광주 지역의 유치원 원장 및 원감 6인	- 유치원 운영위원회 현황 - 유치원 운영위원회 개선방안

면담내용은 모두 녹음을 하여 전사하였으며, 전사한 내용은 연구의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설문조사 내용을 구성하며, 심층 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나. 설문조사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운영 현황과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설문조사 대상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과 178개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전문직과 전국 유치원의 원장,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유아교육전문직 147명, 유치원장 520명, 유치원교사 1,812명, 유치원 학부모 936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의 배경은 <표 2>, <표 3>과 같다.

<표 2> 교육전문직/학부모 응답자 배경

단위: %(명)

교육전문직	계(n=147)	학부모	계(n=936)
성별		성별	
남	12.9	남	9.7
여	87.1	여	90.3
소속기관		교육정도	
시·도 교육청	21.8	중졸이하	2.5
지역교육지원청	78.2	고졸	13.8
직위		전문대졸	27.7
장학관	6.8	대졸	48.6
장학사	88.4	대학원졸	9.4
기타	4.8		
전문직 경력		가계소득	
5년미만	72.8	200만 원이하	7.4
5-10년미만	18.4	200-300만 원미만	24.7
10년이상	8.8	300-400만 원미만	30.8
유아교육 경력		400-500만 원미만	21.1
5년미만	36.7	500-600만 원미만	7.5
5-10년 미만	8.2	600만 원이상	8.7
10년 이상	55.1		
근무지역		자녀유치원소재지	
대도시	27.9	대도시	40.7
중소도시	37.4	중소도시	39.5
읍면	34.7	읍면	19.8
연령		연령	
20대	1.4	20대	1.9
30대	2.0	30대	72.9
40대	50.3	40대	25.0
50대	46.3	50대	0.1
60대이상	0.0	60대이상	0.1

〈표 3〉 원장/교사 응답자 배경

단위: %(명)

원장		교사		
계(n=520)		계(n=1812)		
성별		성별		
남	27.3	남	0.4	
여	72.7	여	99.6	
직위		직위		
원장	55.6	주임(부장)교사	17.7	
원감	44.4	담임교사	78.4	
		기타	3.9	
설립유형		설립유형		
국립	0.6	국립	0.9	
공립단설	11.7	공립단설	7.8	
공립병설	44.4	공립병설	67.8	
사립법인	11.4	사립법인	9.2	
사립사인	31.9	사립사인	14.4	
유치원재직경력		유치원재직경력		
10년미만	30.4	3년미만	12.4	
10-20년미만	25.0	3-6년미만	19.7	
20년이상	44.6	6-10년미만	19.3	
원장(감)경력		10-20년미만	21.5	
5년미만	53.1	20-30년미만	26.8	
5-10년미만	25.8	30년이상	0.5	
10년이상	21.2			
연령		연령		
20대	0.0	20대	24.1	
30대	8.7	30대	36.3	
40대	27.1	40대	34.7	
50대	55.0	50대	4.8	
60대이상	9.2	60대이상	0.1	
근무지역		근무지역		
대도시	42.9	대도시	35.6	
중소도시	32.5	중소도시	35.9	
읍면	24.6	읍면	28.6	

2) 설문조사 도구

설문지는 문헌연구와 면담조사 내용을 근거로 연구진이 구성하였다. 구성된 설문지는 유아교육전문직 3인, 유아교육전문가 3인, 현장전문가 1인 총 7인에게 서면 자문을 받아 수정한 후, 대상별 예비조사를 거쳐 최종 수정하였다. 설문지의 구성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설문지의 구성

구분		문항내용			
		교육전문직용	원장용	교사용	학부모용
배경 변인	개인	성별, 연령, 직위, 전문직 경력, 유아교육 경력	성별, 연령, 재직경력, 원장경력	성별, 연령, 재직경력, 담당 학급	성별, 연령, 교육정도, 가계소득, 자녀 수
	기관	교육청 소재지	설립유형, 유치원 소재지, 규모, 운영시간	설립유형, 유치원 소재지, 규모, 운영시간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설립유형, 소재지
유치원 운영위원회		관내 구성 여부 및 수, 필요성 및 이유, 필요한 지원	운영 형태, 필요성 및 이유, 구성원, 모임 횟수, 역할, 어려운 점, 필요한 지원	운영 여부 및 만족도, 필요성 및 이유, 역할 기대	

3) 설문조사 연구절차

문헌연구와 면담조사를 근거로 연구진이 구성한 설문지는 2011년 7월 6일~9일에 전문가 7인의 서면 자문을 받아 수정하였다. 수정한 설문지는 유치원장(감) 5인과 교사 13인, 학부모 10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거쳐 최종 수정하였다. 최종 수정한 설문지는 9월 2일~23일에 온라인 설문 형태로 구축하였다. 9월 26일에 교육과학기술부로 설문조사 협조 공문을 보냈으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국공립교원연합회, 전국 사립유치원연합회에 협조를 요청하여 연합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설문조사에 대한 안내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9월 28일~10월 18일에 실시하였다.

4) 설문조사 자료분석

수거된 설문지는 SPSS 12.0(Window용)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및 집단 간 비교분석을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기본배경과 주요변인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설문지 문항 분석을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위해 χ^2 , t 검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가.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1)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구성 여부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16개 시도별 교육청 관내 유치원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구성되어 있다는 교육청이 83개청으로 조사되었

으며, 구성되지 않은 곳은 64개청이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경기지역에서 구성되어 있는 교육청이 21개청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10개미만의 교육청이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16개 시도별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교육전문직)

단위: 개

과제	예	아니오	계
전체	83	64	147
서울	5	10	15
부산	1	5	6
대구	1	4	5
인천	3	1	4
광주	2	1	3
대전	3	0	3
울산	2	0	2
경기	21	2	23
강원	8	2	10
충북	6	2	8
충남	6	4	10
전북	5	4	9
전남	3	10	13
경북	9	4	13
경남	7	13	20
제주	1	2	3

2)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구성 형태

운영위원회 구성 형태에 대해 살펴보면, 구성이 되어있지 않다는 응답이 33.5%로 나타났다. 구성되어 있는 경우 형태는 학부모협의회가 28.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19.6%, 초등학교 운영위원회가 14.9%, 초등학교 소속 분과 위원회는 3.4%로 적었다.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립유치원은 구성되지 않았다(사립 법인 54.4%, 사립사인 54.9%)는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국립이나 공립병설의 경우 학부모협의회(국립 31.6%, 공립병설 32.6%) 형태로 운영되는 비율이 높았으며, 공립단설은 독자적인 유치원 운영위원회(65.8%) 형태로 운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운영위원회 형태

단위: %(명)

과제	유치원 운영위원회	초등학교 소속 분과 위원회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협의회	구성 안됨	계
전체	19.6	3.4	14.9	28.6	33.5	100.0(2332)
국립	21.1	-	26.3	31.6	21.1	100.0(19)
공립단설	65.8	0.5	3.0	17.8	12.9	100.0(202)
공립병설	12.5	5.2	22.8	32.6	27.0	100.0(1459)
사립법인	22.6	-	1.3	21.7	54.4	100.0(226)
사립사인	20.2	0.5	0.5	23.9	54.9	100.0(426)
$\chi^2(df)$			622.8.***	(16)		

심층 면담을 통해서도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다양한 형태도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설유치원의 경우는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형태로, 병설유치원의 경우 종일반 운영위원회나 학부모 협의회를 통해 협의하고 결정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단설유치원에서는 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병설유치원은 그냥 종일반 운영위원회라던가 학부모협의회, 운영위원회까지는 안 되고 학부모협의회라던가 종일반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전반적인 것은 거기서 다 협의하고 해요. (H 교육청 장학관, 2011년 4월 22일)

병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따라서 초등학교에 같이 하나의 위원회로 참여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도 참여를 안 하는데 와서 보고를 해라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 경우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병설은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N 교육청 장학사, 2011년 5월 17일)

독자적인 운영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유치원 규모가 작아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5.2%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유치원 운영에 필요치 않아서라는 응답이 28.9%, 학부모회에서 협의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응답은 6.0%로 나타났다. 대상별로는 원장과 교사는 유치원 규모가 작아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각각 54.6%, 65.7%로 교육전문직과 학부모보다 더 높게 나타난 반면, 교육전문직은 학부모회에서 협의해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0.0%로 다른 대상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립과 공립병설은 유치원 규모가 작아서가 각각 40.0%, 6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립단설, 사립법인, 사립사인의 경우 유치원 운영에 필요하지 않다(공립단설 42.0%, 사립법인 51.5%, 사립사인 47.5%)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운영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은 기타 이유로는 학교운영위원회 분과로 구성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형식적인 절차가 많아서 담당교사의 업무

가 과중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학부모의 기타 의견으로는 교사와 기관에 대한 믿음이 있고, 만족하기 때문이라는 의견과 참여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서라는 의견이 있었다.

〈표 7〉 독자적인 운영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과제	유치원 규모작음	유치원 운영에 필요 없음	학부모회에서 협의함	기타	계
전체	55.2	28.9	6.0	9.9	100.0(1,506)
교육전문직	35.0	10.0	50.0	5.0	100.0(20)
대 원장	54.6	34.1	0.0	11.4	100.0(273)
상 교사	65.7	26.7	0.0	7.6	100.0(925)
학부모	23.6	32.3	27.8	16.3	100.0(288)
$\chi^2(df)$			63.4 ^{***} (9)		
설립유형					
국립	40.0	25.0	10.0	25.0	100.0(20)
공립단설	34.8	42.0	10.1	13.0	100.0(69)
공립병설	65.5	21.0	5.5	8.0	100.0(1,019)
사립법인	25.4	51.5	5.2	17.9	100.0(134)
사립사인	37.7	47.5	3.3	11.5	100.0(244)
$\chi^2(df)$			162.5 ^{***} (12)		

운영위원회 조직구성원에 대해 살펴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원 수는 전체 6.92명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학부모 대표가 평균 3.10명으로 유치원 교원대표 2.61명, 지역 사회인사 0.78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원장이 응답한 구성원 수에 대해 응답한 평균이 교사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났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기타 조직 구성원으로는 행정실장, 교수 등이 있었다.

〈표 8〉 운영위원회 조직구성원 형태

단위: 명

구분	유치원 교원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		기타		계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전체	2.61	477	3.10	476	0.78	467	0.39	460	6.92	460
원장	2.70	132	3.04	132	1.03	130	0.31	127	7.13	127
교사	2.58	345	3.12	344	0.68	337	0.42	333	6.83	333
<i>t</i>	0.54		0.15		15.52 ^{***}		1.18		1.01	

***p<.001

심층 면담을 통해서도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수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공통적으로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인사를 포함하고 있었다.

지금 학부모위원 세 분, 교원위원 세 분, 지역사회위원 한 분. 그래서 일곱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금년 운영되는 게 훨씬 더 체계적으로 운영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착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B 병설유치원 원감, 2011년 6월 22일)

저희는 학급이 이제 한 학급 당, 각 반에서 한명 씩 다 뽑아서, 위원을 하고, 아홉 명. 지역위원, 이렇게 다 해서 했는데, 절차를 하라 그런 것 저희는 그냥 해요. 홈페이지에 올리고, 운영위원회 구성합니다. (G 단설유치원 원장, 2011년 6월 22일)

운영위원회 개최 횟수에 대해 살펴보면, 국립과 사립법인은 의제가 있을 때마다 개최한다(국립 50.0%, 사립법인 51.%)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공립병설과 사립사인의 경우 학기별 1회가 각각 37.4%, 33.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월 1회로 하되, 의제가 있을시 수시로, 학기별 1회로 하고, 의제가 있을 때마다 개최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9〉 운영위원회 개최 횟수

과제	단위: %(명)					계
	분기별 1회	학기별 1회	1년에 1회	의제 있을 때마다	기타	
전체	20.2	30.3	8.8	38.8	2.0	100.0(456)
국립	25.0	25.0	-	50.0	-	100.0(4)
공립단설	30.1	20.3	1.5	48.1	-	100.0(133)
공립병설	14.3	37.4	9.9	35.7	2.7	100.0(182)
사립법인	11.8	25.5	7.8	51.0	3.9	100.0(51)
사립사인	22.1	33.7	18.6	23.3	2.3	100.0(86)
$\chi^2(df)$				53.0*** (16)		

3) 운영위원회 구성의 필요성

운영위원회 구성이 필요한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55.9%로 절반 이상이였다. 대상별로는 교육전문직은 필요하다는 응답이 86.4%, 학부모는 69.2%로 원장과 교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원장과 교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각각 52.5%, 51.0%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으며, 교육전문직 13.6%, 학부모 30.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립과 공립단설, 사립법인은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국립 86.4%, 공립단설 78.0%, 사립법인 64.7%)는 비율이 높았으며, 사립사인 유치원은 필요하다(57.7%)는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42.3%)는 응답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공립병설 유치원의 경우 필요하지 않다(52.7%)고 응답한 비율이 필요하다(47.3%)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운영위원회 구성의 필요성

단위: %(명)

과제	예	아니오	계
전체	55.9	44.1	100.0(3415)
대상			
교육전문직	86.4	13.6	100.0(147)
원장	47.5	52.5	100.0(520)
교사	49.0	51.0	100.0(1812)
학부모	69.2	30.8	100.0(936)
$\chi^2(df)$		173.3*** (3)	
설립유형			
국립	68.8	31.2	100.0(64)
공립단설	78.0	22.0	100.0(314)
공립병설	47.3	52.7	100.0(1932)
사립법인	64.8	35.2	100.0(381)
사립사인	57.7	42.3	100.0(577)
$\chi^2(df)$		135.0*** (4)	

*** $p < .001$

운영위원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운영 자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2.6%로 과반수 가까이 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학부모의 유치원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7.3%, 유치원이 유아 학교로써 위상과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은 19.1%,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10.2% 순이었다. 대상별로는 교육전문직은 운영 자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79.5%로 원장이나 교사, 학부모 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원장과 교사는 유치원이 유아 학교로써 위상과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학부모는 학부모의 유치원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른 대상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립유치원은 학부모의 유치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54.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립단설과 공립병설, 사립법인과 사립사인 유치원은 운영의 자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비율이 각각 51.4%, 34.7%, 47.4%,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타 이유로 부모와 유치원 간의 상호이해 및 전문성 확보, 유치원 감독 및 평가를 통한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해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11〉 운영위원회가 필요한 이유

단위: %(명)

과제	운영 자율성 투명성제고	유아 학교위상 기능강화	학부모 유치원 관심제고	유치원 초등 체제 다름	기타	계
전체	42.6	19.1	27.3	10.2	0.7	100.0(1909)
대상						
교육전문직	79.5	9.4	9.4	0.8	0.8	100.0(127)
원장	38.1	25.5	21.9	14.6	0.0	100.0(247)
교사	38.1	24.1	22.8	14.5	0.5	100.0(887)
학부모	43.4	11.6	39.2	4.5	1.4	100.0(648)
$\chi^2(df)$			205.7*** (12)			
설립유형						
국립	27.3	9.1	54.5	6.8	2.3	100.0(44)
공립단설	51.4	19.6	22.4	6.1	0.4	100.0(245)
공립병설	34.7	20.7	29.0	14.8	0.8	100.0(913)
사립법인	47.4	20.2	27.9	3.2	1.2	100.0(247)
사립사인	42.3	18.3	29.1	9.9	0.3	100.0(333)
$\chi^2(df)$			72.5*** (16)			

***p<.001

나.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1)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16개 시도별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관내 유치원 중 설립유형별로 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원의 비율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단설유치원은 거의 99.6%가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병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은 각각 46.7%, 48.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유치원이 운영하고 있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단설유치원은 강원도 지역만 95.8%가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다른 지역은 100% 운영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대구와 광주지역은 단설을 제외한 병설과 사립유치원은 모두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울산지역은 병설유치원은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사립유치원도 1.9%로 나타나 단설을 제외한 유치원들은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병설유치원은 경북 지역이 77.8%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 광주, 울산지역은 운영하고 있는 병설유치원이 없었다. 사립유치원은 강원, 충북, 경북 지역이 80% 이상 유치원이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대구와 광주지역은 운영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16개 시도별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
전체	99.6	46.7	48.7
서울	100.0	37.1	2.8
부산	100.0	40.0	17.0
대구	100.0	0.0	0.0
인천	100.0	74.4	66.7
광주	100.0	0.0	0.0
대전	100.0	66.7	54.9
울산	100.0	0.0	1.9
경기	100.0	30.2	20.6
강원	95.8	73.1	89.5
충북	100.0	36.4	86.7
충남	100.0	66.7	41.1
전북	100.0	28.7	28.3
전남	100.0	3.9	50.0
경북	100.0	77.8	87.7
경남	100.0	59.8	50.0
제주	-	10.4	100.0

심층 면담을 통해서도 단설유치원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병설유치원은 대부분 학교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며, 사립유치원의 경우도 대부분의 시·도에서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활동은 하지 않고 구성만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단설유치원은 필히 운영위원회를 조직하라고 했구요. 병설유치원에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되도록 유치원 학부모 중에 한분이 참여하도록 권장을 했고. 사립유치원들도 학부모 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조직을 하라고 했거든요. (F 교육청 장학사, 2011년 4월 25일)

사립은 일부 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작년에 현황을 조사해보니 삼분의 일 정도는 이해하고 조직만 해 놓고 삼분의 일은 조직도 하지 못하였어요. (L 교육청 장학사, 2011년 6월17일)

2)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기능

유치원 운영위원회 업무에 대해 살펴보면, 교육과정 협의가 2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종일반 운영 협의가 19.2%, 학부모 부담 경비에 대한 심의가 18.9%, 급간식 협의가 14.1%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별로는 원장과 교사 모두 교육과정에 대한 협의 업무가 각각 22.6%, 22.2%로 가장 많았다.

〈표 13〉 운영위원회 업무

단위: %(명)

과제	교육과정 협의	급간식 협의	종일반 운영 협의	예결산 심의 자문	학부모 부담경비 심의	연간 교육계획 심의	기타	계
전체	22.3	14.1	19.2	13.4	18.9	11.2	1.0	100.0(1587)
원장	22.6	12.1	18.2	14.6	19.6	12.5	.5	100.0(439)
교사	22.2	14.8	19.6	12.9	18.6	10.6	1.2	100.0(1148)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다양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종일반 운영 방식, 특성화 프로그램 관련 내용, 현장 학습, 원복 등의 결정과 같은 활동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성화 프로그램에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횟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학부모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거든요. (F 교육청 장학사, 2011년 4월 25일)

현장학습을 가거나 이럴 때 저희는 항상 운영위원회에 걸쳐서 하거든요. 그럴 때 저희 유치원은 저희는 어디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버스는 얼마에 대절을 하고... (D 병설유치원 원감, 2011년 6월 22일)

현재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운영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학부모 부담 경비에 대한 심의가 2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교육과정 협의가 21.1%, 종일반 운영 협의가 17.9%, 급간식 협의가 16.6%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별로는 교육전문직, 원장, 교사 모두 학부모 부담 경비에 대한 심의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반면에, 학부모는 교육과정 협의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14 참조).

〈표 14〉 운영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일

단위: %(명)

과제	교육과정 협의	급간식 협의	종일반 운영 협의	예결산 심의 자문	학부모 부담경비 심의	연간 교육계획 심의	기타	계
전체	21.1	16.6	17.9	12.7	21.3	9.3	1.1	100.0(9466)
교육전문직	17.9	16.0	17.7	16.6	20.6	10.6	0.5	100.0(592)
원장	21.2	15.0	18.5	11.5	21.9	10.4	1.5	100.0(1486)
교사	20.2	16.2	18.6	13.4	23.8	7.1	0.8	100.0(4879)
학부모	23.3	18.5	16.4	11.3	16.1	12.8	1.6	100.0(2509)
국립	64.1	10.9	6.2	3.1	7.8	4.7	3.1	100.0(64)
공립단설	62.4	13.4	4.1	7.3	9.9	1.0	1.9	100.0(314)
공립병설	55.5	15.9	8.7	5.1	12.3	1.0	1.4	100.0(1932)
사립법인	60.1	16.3	3.7	8.1	5.8	2.6	3.4	100.0(381)
사립사인	60.6	16.0	6.2	3.5	7.6	2.1	4.0	100.0(576)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립, 공립단설과 병설, 사립법인과 사인 유치원 모두 운영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 교육과정협의(국립 64.1%, 공립단설 62.4%, 공립병설 55.5%, 사립법인 60.1%, 사립사인 60.6%)라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이였다. 운영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일로 제시된 기타 의견으로 등하원 차량, 행사, 교사 처우개선, 부모교육 등이 있었다.

다.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인식

1)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만족도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부모에게 운영위원회 만족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4점 만점에 2.94점, 만족한다는(만족함+매우 만족함) 긍정적인 응답이 약 86%로 만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15〉 학부모 운영위원회에 대한 만족도(학부모)

단위: %(명), 점

매우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만족함	매우 만족함	평균	사례수
2.8	11.4	74.4	11.4	2.94	317

심층면담 결과, 유치원 운영위원회의를 운영하면서 기관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가 더욱 높아졌으며, 교육과정, 수업일수 등과 같은 기관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와 관심이 증대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부모들이 낸 돈, 예산집행에 관해 투명해지니까 굉장히 높은 신뢰감을 갖고 있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것, 교육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것. 수업 일수에 대한 것. 이런 것을 초중고등학교처럼 하듯이 저희도 그렇게 금년부터 그렇게 하니깐 훨씬 더 많이 참여를 원해요. (B 병설유치원 원감, 2011년 6월 22일)

작년에 하고 나서 결산보고까지 다 인제 결과 보고까지 다 했어요. 그, 한 학년 마치면서 2월 달에 인제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해가지고 전체 우리 운영 이렇게 이렇게 해 왔다. 그 담에 뭐 프로그램, 어떻게 어떻게 했다. 어머님들은 좋아하시지요. (G 단설유치원 원장, 2011년 6월 22일)

2)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의 어려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치원 운영위원회에 대한 학부모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였다. 먼저,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

육과과학기술부에서 유치원 운영위원회에 관한 지침은 내려왔으나 유치원 운영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립유치원들의 경우 책무성과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공개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상반기에 법적근거를 주고 하반기에 다 시·도마다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다 해서 했는데... 운영위원회에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힘들죠. (I 교육청 장학사, 2011년 4월 27일)

솔직히 공립은 하겠지만 사립은 안한다고 봐야겠죠... 입학초기에 벌써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입학금까지 모두 징수해 버리지 않습니까? 원복이라든지 어머니들이 운영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절차와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 배정을 받아버리니깐. 여태까지의 유치원 체제에서 사립유치원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깐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하라고 했지만, 초등학교처럼 법으로 되어있지 않으니... (L 교육청 장학사, 2011년 6월17일)

둘째, 자문기구로서 역할의 한계이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사립의 경우 심의기구로서의 역할이 필요한데, 실태 파악도 어려운 상황이라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의 생각은 공사립 구분하지 말고 다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부모에게 힘을 줘야지, 학부모 힘으로 운영이 되는 기관인데. 공립 같은 기관은 그렇지 않지만 뭐가 좀 바뀐 것 같아서... (L 교육청 장학사, 2011년 6월17일)

국공립은 심의 기구예요 운영위원회가. 근데 사립은 심의가 아니예요. 저는 그것부터 이해가 안 갔어요. 사실 심의를 많이 해야 하는 곳은 사립인데. 사립은 협의기구로 만들어 놓고. 학부모들이 민원전화가 많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도 납입금 동결 될 올렸 다. 협의가 안 되셨나 물어보면, 우리는 협의가 왔는지도 모른다. 운영위원회가 단설... 단설은 해요. 초등학교 분위기가 그래왔으니까... (L 교육청 장학사, 2011년 6월17일)

셋째, 유치원 규모의 한계이다. 유치원의 규모가 작은 경우 운영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구성하기보다는 초등학교에 속해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행정업무가 많은 소규모 유치원에서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또한 하나의 부가적인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의 병설유치원이 혼자잖아요. 다른 업무도 가중이 되어 있는데다가 종일제도 힘든데... 이 업무가 행정실에서 사실 도와줘야하는데... 행정실이 유치원을 위한 행정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업무들이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단설유치원은 문제가 없고... (I 교육청 장학사, 2011년 4월 27일)

우리가 초중학교의 운영위원회를 따르기에는 우리 학교는 규모가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될 거 같아요.. 거기는 행정실장이 간사고 그럴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실장이 우리는 없고... 병설 유치원 같은 경우는 다 검임을 하고 있고... (A 교육청 장학사, 2011년 4월19일)

넷째, 행·재정 공개 수준에 대한 의견 불일치이다.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립 같은 경우 실제로 심의할 일이 별로 없고, 심의할 것들이 많은 사립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공개를 하기가 쉽지 않아 공개 수준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돈을 걷어가지고 뭐 하는 거 있으면 걷느냐 마느냐 그런 걸 심의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없거든요. 별로... 다른 위원들의 규칙들 보고 그랬는데... 의결할 일이 별로 없더라구. 의결하고 심의하는 일이... (N 교육청 장학사, 2011년 5월 17일)

사립은 운영위원회가 현실적으로 분명히 불가능하고요, 저희도 이제 한 번 해 보려고 했는데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너무 말이 많구요. 또 '운영위원회 선정된 부모들의 아이들을 특별 대접한다.'라는 이상한 말도 생기고 그래서 아예 그냥 유치원의 출입을 다 금했어요. (C 사립유치원 원장, 2011년 6월 22일)

사립에서는. 개인이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오픈해서 학부모위원회에서...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예결산을 오픈해서 제로로 떨어져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곳이 적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즘 국가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감사기능 이런 것이 유아교육법에 없습니다. (C 교육청 장학사, 2011년 5월 17일)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 관련 지침 및 매뉴얼 부족하다는 것이다.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운영하라고 공문은 내려왔으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서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지침을 참고하더라도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대로 실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간소화한 유치원만의 지침이나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제 초등학교처럼 어렵게... 굉장히 어렵대요. 공고해야 되고 한 달인가 줘야하고 입후보해야하고 선출해야하고... 그런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요즘은 학부모들은 투명성을 다 공개해라 이러니까 그것도 공개해야하고... 그러한 절차들이 여태까지 우리는 그동안 안 해왔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거예요.(중략) 올해는 운영위원회에 대한 다른 지침이 딱히 없어서 공문을 내려 보낸 것도 없어요. (A 교육청 장학사, 2011년 4월 19일)

단설은 학교 운영위원회 하듯이 똑같이 공고를 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라는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로써는 학교운영위원회 그 방법밖에 할 수 밖에 없어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배워서 하고 있어요. (B 교육청 장학사, 2011년 6월 21일)

설문조사를 통해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자문기구로써 역할의 한계가 3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구성원들의 자격이나 경험 부족이 27.4%, 법적제도 근거가 미약하다는 응답이 13.2%, 유치원 규모가 작

아서 구성할 수 없다는 응답이 12.9%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별로는 원장은 행·재정 공개 범위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15.2%로 교사의 6.3%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교사는 유치원 규모가 작아서 구성할 수 없다는 응답이 15.7%로 원장의 5.6%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표 V-3-35 참조).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립법인과 사인은 자문기구로서의 역할 한계가 각각 45.1%, 3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립단설은 구성원의 자격이나 경험 부족(33.8%)이, 공립병설은 자문기구로서의 역할 한계가 28.6%로 구성원이 자격이나 경험 부족(28.0%)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어려움은 학부모의 인식과 시간 부족으로 인해 참여가 저조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16〉 운영위원회 운영의 어려움

단위: %(명)

과제	자문기구 역할한계	법적제도 근거미약	유치원 규모 작음	행·재정 공개범위 의견 불일치	구성원 자격 경험부족	기타	계
전체	31.4	13.2	12.9	8.8	27.4	6.4	100.0(456)
원장	28.0	16.8	5.6	15.2	31.2	3.2	100.0(125)
교사	32.6	11.8	15.7	6.3	26.0	7.6	100.0(331)
$\chi^2(df)$				21.2*** (5)			
국립	50.0	-	-	-	50.0	-	100.0(4)
공립단설	26.3	19.5	6.8	6.8	33.8	6.8	100.0(133)
공립병설	28.6	12.6	18.7	5.5	28.0	6.6	100.0(182)
사립법인	45.1	9.8	13.7	5.9	17.6	7.8	100.0(51)
사립사인	36.0	7.0	10.5	20.9	20.9	4.7	100.0(86)
$\chi^2(df)$				47.6*** (20)			

*** $p < .001$

3) 유치원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운영위원회 추진 시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표 17>과 같다. <표 1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운영지침에 대한 매뉴얼 제공이 46.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구성형태 다양성 허용이 27.1%, 운영 법적 제도 근거가 23.7%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별로는 교육전문직은 운영 법적 제도 근거가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40.1%로 원장과 교사보다 더 높게 나타난 반면에, 원장은 구성형태의 다양성을 허용해 달라는 응답이 35.8%로 교육전문직과 교사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교사는 운영지침에 대한 매뉴얼 지급을 지원해 달라는 응답이 49.2%로 원장의 38.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기관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기관이 운

영지침 매뉴얼 제공(국립 57.9%, 공립단설 50.0%, 공립병설 47.6%, 사립법인 50.4%, 사립사인 40.6%)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운영위원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으며, 병설유치원 교사의 업무 가중으로 행정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17〉 운영위원회 추진 시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명)

과제	운영법적 제도근거	운영지침 매뉴얼 제공	구성형태 다양성 허용	기타	계
전체	23.7	46.8	27.1	2.3	100.0(2479)
교육전문직	40.1	45.6	12.2	2.0	100.0(147)
원장	21.2	38.8	35.8	4.2	100.0(520)
교사	23.1	49.2	25.8	1.8	100.0(1812)
$\chi^2(df)$			65.3 ^{***} (6)		
국립	15.8	57.9	26.3	-	100.0(19)
공립단설	30.2	50.0	17.3	2.5	100.0(202)
공립병설	22.4	47.6	27.5	2.5	100.0(1459)
사립법인	22.1	50.4	25.7	1.8	100.0(226)
사립사인	20.7	40.6	36.4	2.3	100.0(426)
$\chi^2(df)$			31.8 ^{***} (12)		

*** $p < .001$

4. 요약 및 정책 제언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유치원 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16개 시도별 교육청 관내 유치원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구성 형태를 살펴본 결과, 학부모협의회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유치원 운영위원회,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초등학교 소속 분과위원회 순으로 나타났다. 운영위원회 조직 구성원에 대해 살펴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원 수는 6.92명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학부모 대표가 평균 3.10명으로 유치원 교원대표 2.61명, 지역 사회인사 0.78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운영위원회 구성이 필요한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교육개발원(2005)이 유치원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유치원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75%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한편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로는 '운영 자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과반수 가까이 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학부모의 유치원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기 때문’, ‘유치원이 유아 학교로서의 위상과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단설유치원은 거의 대부분(99.6%)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병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은 절반 정도밖에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 유치원 운영위원회에서 주로 하고 있는 업무로는 교육과정 협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종일반 운영 협의, 학부모 부담 경비에 대한 심의, 급간식 협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교육과정 운영, 급간식, 종일반 운영, 유치원 발전 기금, 예·결산 및 학부모 부담 수혜성 경비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기구이다. 이러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다양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종일반 운영 방식, 특성화 프로그램 관련 내용, 현장 학습, 원복 등의 결정과 같은 활동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부모에게 운영위원회 만족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만족한다는(만족함+매우 만족함)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높아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의 어려움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유치원 운영위원회에 관한 지침은 내려왔으나 유치원 운영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실제로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실태 파악도 어렵고, 책무성과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공개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사립이 심의기구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며, 그러한 면에 있어서 실태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등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유치원의 규모가 작은 경우 운영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구성하기보다는 초등학교에 속해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행정업무가 많은 소규모 유치원에서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또한 하나의 부가적인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넷째,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 실제로 심의할 일이 별로 없고, 심의할 것들이 많은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공개를 하기가 쉽지 않아 공개 수준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다섯째,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운영하라고 공문은 내려왔으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서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워 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의 지침을 참고하더라도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대로 실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간소화한 유치원만의 운영지침이나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95년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는 초기에 학교장들의 반대가 많았으나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성열·공동배, 2007). 또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학교회계제도 도입이 가능했고, 학교발전기금 설치도 가능했다(송기창, 2011). 이와 마찬가지로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재정 운영의 자율화와 학부모의 유아교육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2012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 관련 법규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다.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절차를 통하여 원장을 선발하는 유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다.

③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3.21] [시행일 2012.9.1]

이와 같이 유치원 운영위원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유치원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와 더불어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운영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현장에서는 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의 자격이나 경험 부족으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치원의 특성에 근거한 세부 지침과 매뉴얼이 마련되어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유치원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나 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식과 시간이 부족하여 부모의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0. 2). 유치원 경영 개선을 위한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내부자료.
- 김성열·공동배(2007). 국공립학교운영위원회 성과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5(4), 163-184.
- 송기창(2011). 유아교육재정의 쟁점과 과제. 유아교육연구, 31(1), 43-59.
- 한국교육개발원(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3: 유치원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



유치원 혼합반 현황과 과제

발표자: 이윤진(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유치원 혼합반 현황과 과제

이윤진(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난 2011년 정부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일원화하는 ‘5세 공통과정’을 발표하면서 “~~만 5세아를 만 3~4세와 분리하여~~”(국무총리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2011. 5. 2 보도자료)라고 명시한 바 있다. 이 문구에서 내실있는 5세 누리과정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령별 반편성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여기에 올해 3, 4세 누리과정이 제정되고 내년부터 실시될 계획이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연령별 반편성은 누리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 하겠다. 이러한 정책변화 속에서 읍면도서 지역에 주로 밀집되어 있는 혼합반—대개 1개 학급의 1명의 교사가 수업을 운영하는 형태—유치원에 정책적 관심을 갖게 되었다.

물론, 혼합반이 반드시 정책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문제가 있는 반편성은 아니다. 기존의 이론이나 많은 연구들에서 혼합반의 장점들이 규명되었다. 그리고 실제 이론적·교육철학적 근거를 토대로 혼합반을 ‘의도적’으로 운영하는 유치원이 국내외 상당히 있다. 혼합반의 장점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Vygotsky 사회학습이론과 피아제의 구성주의 이론을 꼽을 수 있다. 특히, Vygotsky 사회학습이론의 핵심 개념인 ‘비계설정(scaffolding)’은 혼합반의 장점을 지지하는 이론으로 각광받아 왔는데, 혼합반의 높은 연령의 유아들이 낮은 연령의 유아들로 하여금 사회·인지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비계’역할을 제공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혼합반의 장점으로는 단일연령학급에 비해 혼합연령학급의 유아들이 사회인지적 능력이 더 높으며(신은수, 1996; 김경화·서영숙, 2006), 혼자놀이보다 집단놀이와 상징놀이를 더 많이 하며 비참여 및 공격적 행동은 적게 나타내고(김명순·유정은·이민주·조향린, 2011), 다양한 아동들 내에서 자주적이면서도 협동적인 인간관계를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다는 점(이명환, 2005) 등이 있다.

혼합반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맨 처음에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롭게 제정된 5세 누리과정이나 앞으로 제정될 3, 4세 누리과정이 연령별 편성을 전제로 개발되므로 혼합반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은 있다. 또한, 혼합반의 구체적인 현황이나 운영실태를 파악한 기초연구나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에서 본고에서 제시한 통계 수치들은 혼합반 유치원을 이해하는 데 일조하리라 기대한다.

본고에서 다루려는 혼합반은 1) 유치원에 한정하며 2) 만 5세아가 만 3, 4세아 또는 만 4세(3세아)아와 혼합되어 기본교육과정 시간대에 교육을 하는 학급을 의미한다.

2. 혼합반 유치원의 특성

가. 지역

교육통계에 의하면, 유치원의 총 학급수는 25,679개 있다(2010년 기준).¹⁾ 국립 14개, **공립 7,115개**, 사립 18,542개로 사립유치원의 학급수가 압도적으로 많다(전체 학급수의 약 72.2%). 다음 <표 1> 을 보면, 2010년도 전국의 혼합반은 총 5,426개이고 이 중 64.2%인 3,485개가 공립병설유치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표 1> 기본과정 혼합반 전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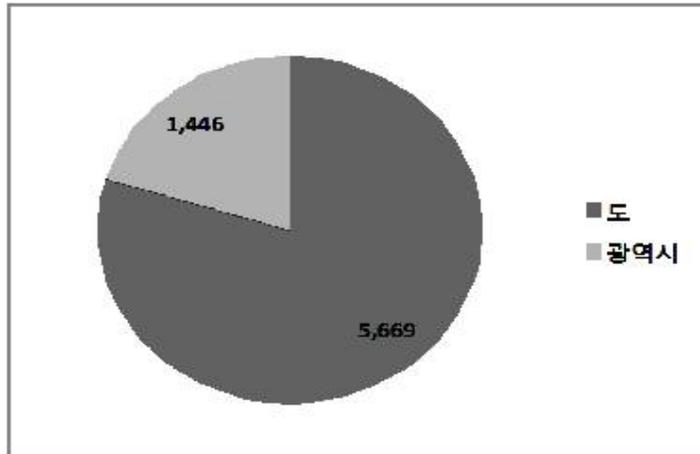
설립 유형별		유치원수 (개)	휴원	학급수(편성학급)				
				계	만3세	만4세	만5세	혼합학급
국립		3	0	8	2	2	3	1
공립	단설	131	0	760	126	228	326	80
	병설	4,301	10	6,291	246	600	1,960	3,485
법인		562	7	2,566	549	702	793	522
사립	사인 (개인)	3,054	37	15,039	3,902	4,706	5,183	1,248
	자가 임대	168	1	479	118	126	162	73
계		8,219	54	25,663	5,066	6,547	8,624	5,426

주: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2010). 기본과정 혼합반 현황

<표 1> 에서 전체 공립학급수 7,051개(단설과 병설 합친 학급수) 중에서 공립병설이 3,485개로, 절반에 가까운 약 49%를 차지하고 있다. 즉, 공립학급의 약 2개 중 1개는 혼합반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혼합반은 어느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지 알아보자. 유치원 공립학급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도 단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참조).

1) <표 1> 의 총 학급수 25,663개와 16개 차이가 있는데, 휴원 등의 이유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자료: <http://kostat.go.kr>(검색일: 2012. 4. 5)

[그림 1] 2010년 시도별 공립학급수(개)

2010년도 도별 혼합반 유치원의 현황은 다음 <표 2> 와 같다. 전체 혼합학급수에서 병설혼합학급수의 비율을 계산해 보았다. 단설공립유치원의 혼합학급수는 수적으로 적을 뿐더러, 후술하겠지만 대부분의 혼합반은 1개 학급의 공립유치원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계산에 제외하였다.

도별로 비율의 정도차이는 있지만, 모든 도에서 혼합반은 대부분 병설에서 운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충북, 강원, 제주는 혼합반의 절대다수가 공립병설임을 알 수 있다.

<표 2> 기본과정 혼합반 도별 현황(2010년)

지역	총학급수	총혼합학급수 (A)	공립혼합학급수		B/A
			단설	병설(B)	
경기	6,450	720	3	470	58%
강원	778	219	3	193	88%
충북	801	241	5	215	89%
충남	1,175	582	13	370	64%
전북	1,247	425	6	352	83%
전남	1,106	624	19	462	74%
경북	1,649	763	3	439	58%
경남	2,099	569	6	450	70%
제주	230	86	0	76	88%

주: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2010). 기본과정 혼합반 현황 재구성

이들 도지역의 유치원은, 도시보다는 읍면도서지역에 많이 설립되어 있다는 점과 연결지어 보면, 결론적으로 혼합반 유치원은 읍면도서 지역의 공립병설유치원에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인구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유치원의 학급수와 학급당 유아수는 관할청이 정하고(제 16조 학급수·원아수) 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학급당 정원수 등의 상황이 다르다. 여기서는 혼합반 비율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인 전남지역을 사례로 보면, 다음과 같이 학급당 유아수를 정하고 있다.

〈표 3〉 전라남도교육청 학급당 유아수 기준

구분	2012학년도	2011학년도
일반학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세 : 15명 - 만4세 : 21명 - 만5세 : 24명 - 혼합연령 : 시지역 23명, 읍이하 19명 ※혼합연령 기준초과시 연령별 편성 ※학급당 최저 원아수: 5명 <p>단, 유아교육시설이 없는 1면 1병설유치원·1도서 1병설유치원은 3명 이상인 경우 학급편성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세 : 15명 - 만4세 : 21명 - 만5세 : 24명 - 혼합연령 : 시지역 23명, 읍이하 19명 ※혼합연령 기준초과시 연령별 편성 ※학급당 최저 원아수: 5명 <p>단, 유아교육·보육시설이 없는 1면 1병설유치원·1도서 1병설유치원은 3명 이상인 경우 학급편성 가능</p>

자료: 전라남도교육청(2012). 2012 전남유아교육

학급당 유아정원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혼합반을 운영하는데 시 지역은 23명, 읍 이하는 19명으로 정하고 있다(표 3참조). 이처럼 유아수의 부족이 혼합반 운영의 주요 이유인 데 유아수가 부족한 이유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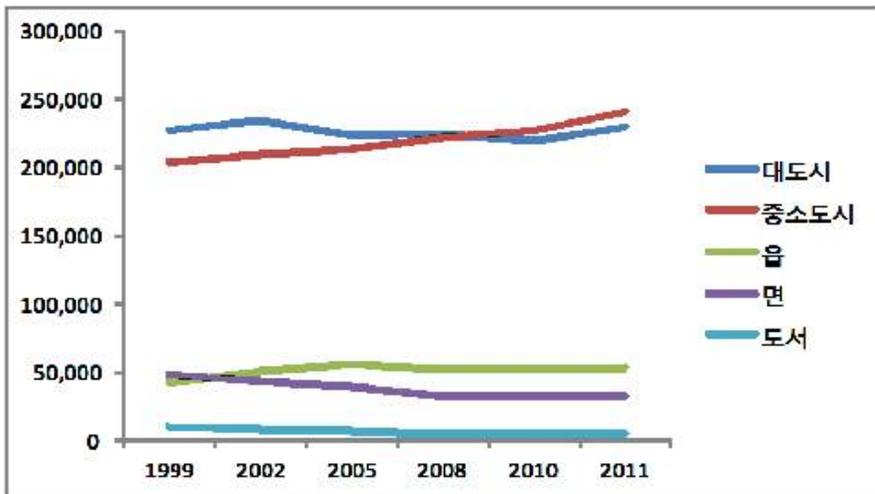
다음의 〈표 4〉와 [그림 2]에서 지역규모에 따른 유치원 원아수의 연도별 변화를 알 수 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부침은 있지만 유치원 원아수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면, 읍 지역은 약간 증가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정체되어 있다. 그런데 면·도서지역은 원아수가 감소추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지역규모별 유치원 원아수 추이

연도	대도시	중소도시	읍	면	도서	합계
1999	227,758	204,326	43,105	48,106	10,546	534,166
2002	235,176	210,772	51,796	44,241	8,271	550,256
2005	224,289	214,150	55,981	39,763	7,420	541,603
2008	224,771	222,198	52,113	33,108	5,602	537,822
2010	222,075	228,413	52,342	32,722	5,035	538,587
2011	230,802	242,071	54,300	32,889	4,772	564,844

단위: 명

자료: <http://cese.kedi.re.kr>(검색일: 2012. 4. 5)



[그림 2] 지역규모별 유치원 원아수 추이변화(1999~2011)

원아수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면·도서 지역은 유아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연령별 편성이 어렵고 결과적으로 혼합반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유치원 원아수의 감소가 얼핏 생각하면, 그 지역의 영유아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합계출산율이 전국 평균 대비해서 읍면도서 지역이 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5〉에서 2010년 기준 전국 합계출산율이 1.226에 비해 병설유치원이 많이 있는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지역의 합계출산율은 각각 1.313, 1.479, 1.537, 1.413로 집계되었다. 오히려 혼합반이 적은 광역시의 합계출산율이 전국 평균을 대체로 밑도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전국 합계출산율 추이변화

단위: 명

	2008	2009	2010
전국	1.192	1.149	1.226
서울특별시	1.010	0.962	1.015
부산광역시	0.980	0.940	1.045
대구광역시	1.072	1.029	1.109
인천광역시	1.186	1.143	1.214
광주광역시	1.198	1.137	1.223
대전광역시	1.215	1.156	1.206
울산광역시	1.338	1.308	1.369
경기도	1.285	1.226	1.309
강원도	1.253	1.248	1.313
충청북도	1.319	1.317	1.402
충청남도	1.444	1.408	1.479
전라북도	1.305	1.279	1.374
전라남도	1.449	1.445	1.537
경상북도	1.313	1.274	1.377
경상남도	1.368	1.323	1.413
제주특별자치도	1.386	1.378	1.463

자료: <http://kostat.go.kr>(검색일: 2012. 4. 5)

따라서 공립병설유치원이 많은 읍면도서 지역에서 출산율 하강이 인구가 감소하고 결과 유치원 원아수도 감소하여 혼합반 운영을 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혼합반 운영의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아봐야 할 대목이다.

첫 번째 추정치는 자녀를 읍면도서 지역에서 출산했으나 교육 등의 이유로 도시지역으로 이사해서 영유아 인구수가 감소해서 혼합반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두 번째 추정은 병설유치원 주변에 어린이집이 설립된 경우가 하겠다. 영유아 인구수는 감소하지 않았지만, 동일 연령대의 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두 곳이라 보니, 원아수가 분산되면서 혼합반으로 운영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학급수, 학생수 등을 고려하지 않은 거친 비교이지만 초등학교 수와 비교해 볼 때, 농어촌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친 수는 예상보다 많았다. 유치원의 혼합반 비중이 70%이상을 차지하는 전남을 보면, 읍면도서지역의 초등학교는 330개인 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친 수는 923개로 약 3배 가까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6〉 도별 읍면도서지역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 수(2010년)

단위: 개

	육아지원기관			초등학교수
	유치원	어린이집	합계	
경기도	533	2,255	2,788	380
강원도	259	397	656	257
충청북도	198	381	579	170
충청남도	405	949	1,354	346
전라북도	263	326	589	256
전라남도	397	526	923	330
경상북도	436	875	1,311	350
경상남도	352	1,221	1,572	312
제주특별자치도	61	422	483	61

주: 유치원과 초등학교 수는 읍면도서 지역 유치원 수를 합산한 수치임.

자료: 유치원; <http://kostat.go.kr>(검색일: 2012. 4. 5) 어린이집: 2010년 보육통계

정확한 비교 수치는 아닌 점을 감안해 보더라도 상황이 이러다보니, 동일 연령대 유아 대상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원아모집은 경쟁적일 수 밖에 없다.2) 따라서 읍면도서 지역의 혼합반을 운영하는 주요 이유는 유아수가 도시로 이사하면서 감소하기도 하겠지만, 유아 인구에 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과도하게 설립하면서 원아모집이 분산된 결과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

3. 설문조사 결과

가. 응답자 특성

기본교육과정 시간대에 혼합반을 담당하는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040명이 표집되었는데3) 이 중 공립이 1,026개로 98.7%를 차지하여 혼합반의 대부분은 공립유치원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공립유치원 중 학급이 1개인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대부분이었다. 사립유치원에서 혼합반은 총 14개4) 표집되어 1.3%를 차지하였다.

2) 최근 실시한 권역별 혼합반 교사 자문회의에서(2012년 3월 실시) 5세 누리과정이 실시되는 올해 일부 지역에서는 만 5세아 모집이 예전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한다. 주요 이유는 첫째 어린이집에서도 유치원과 동일한 교육·보육과정을 배우므로 굳이 유치원을 선택할 필요성이 적어졌고, 둘째 정부지원액이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이 20만원이라면, 공립유치원은 5만9천원에 불과하다고 학부모들이 인식하면서 종전의 저렴한 양질의 교육을 한다는 공립유치원의 잇점이 많이 희석되었다고 함.

3) 유치원 모집단 8,388개에서 무작위로 추출함.

4) 14개 사립유치원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 11개, 대전 2개, 부산 1개로 78.6%가 서울에서 표집됨.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이 21.3%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경기가 21.2%가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대전/충청 15.5%, 부산/울산/경남 14.6%, 대구/경북 11.0% 순이며 소인수 학급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서울로 3.6%였다.

교사연령은 과반 이상인 53.7%가 40대가 가장 많으며 30대 26.0%, 20대 14.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대도시의 유치원이 젊은 교사가 주를 이루는 현상과 대비된다. 교사연령이 대체로 높기 때문에 교사경력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경력은 20~30년 미만 근무가 42.8%로 가장 많았다. 10년 미만 경력이 33.2%, 10~20년 미만이 21.8%를 차지하였다. 앞에서 교사연령이 40대가 가장 많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개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 20대 초중반 경에 유치원 교사를 시작했고 20년 이상 장기 근무를 한 것으로 공무원 신분으로서 국공립유치원 교사의 안정성을 말해준다.

교사학력은 4년제 졸업이 50.6%, 대학원 졸업이 38.0%로 소인수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의 절대다수(약 89%)가 고학력자임을 알 수 있다. 교사의 특성을 종합해 보면, 소인수 혼합반을 담당하는 대다수 교사의 인력은 고학력의 현장 경력이 풍부한 매우 우수한 인력풀이라 하겠다.

〈표 7〉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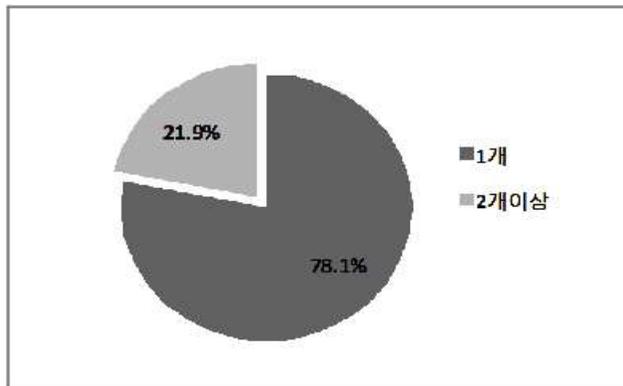
구분		응답자수	비율
전체		1,040	100.0
설립별	공립	1026	98.7
	사립	14	1.3
지역	서울	37	3.6
	인천/경기	220	21.2
	대전/충청	161	15.5
	광주/전라	221	21.3
	대구/경북	114	11.0
	부산/울산/경남	152	14.6
	강원	81	7.8
	제주	54	5.2
교사연령별	20대	150	14.4
	30대	270	26.0
	40대	558	53.7
	50대 이상	62	6.0
교사경력별	10년 미만	345	33.2
	10~20년 미만	227	21.8
	20~30년 미만	445	42.8
	30년 이상	23	2.2
교사학력별	전문대졸	119	11.4
	대졸	526	50.6
	대학원졸	395	38.0

나. 소인수 혼합반 유치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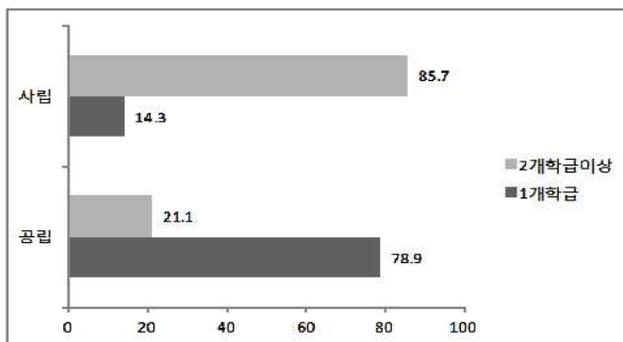
1) 학급수

혼합반의 평균 학급수는 1.25개로 집계되었다. 학급수 1개가 78.1% 학급 2개 이상이 21.9%로서, 혼합반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유치원은 1개 학급임을 알 수 있다(그림 3 참조). 설립별에 따라 혼합반을 운영하는 학급수가 확연하게 차이가 났는데(그림 4 참조), 공립유치원은 1개 학급이 78.9%, 사립유치원은 2개 학급 이상이 85.7%로 대조적인 현상을 보였다.

이처럼 공사립에 따라 혼합반 운영 학급수가 현저하게 차이를 알 수 있다. 공립유치원은 1개 학급으로 혼합반을 운영하지만, 사립은 2개 학급이상에 혼합반을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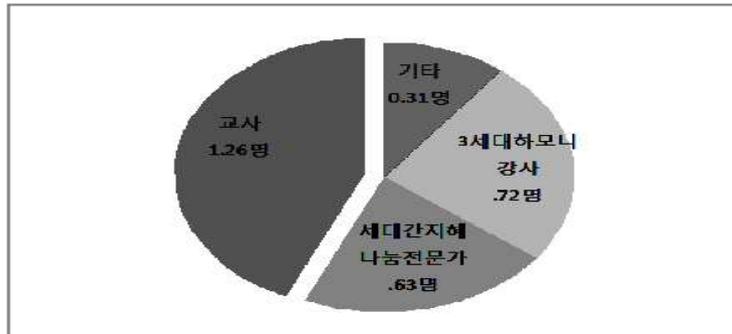
[그림 3] 소인수 혼합반 유치원의 학급수 현황



[그림 4] 유치원 설립별 소인수 혼합반 학급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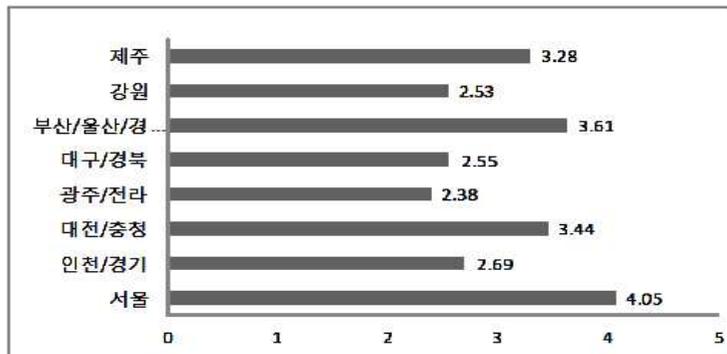
2) 교원 및 보조인력 수

혼합반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원 및 보조인력수는 평균 2.93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교사(중일반 교사 포함)가 1.26명으로 가장 많았고, 3세대하모니강사⁵⁾ 0.72명, 세대간지혜나눔전문가⁶⁾ 0.63명 순이었다(그림 5 참조).



[그림 5] 혼합반 교원 및 보조인력수 현황

지역별로 보면 서울 4.05명, 부산/울산/경남, 3.61명, 대전/충청 3.44명, 제주 3.28명으로 전체 평균 2.93명보다 높았다. 교(직)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전라권으로 평균 2.38명이며 강원, 대구/경북 순으로 혼합반이 많은 지역과 일치하였다.



[그림 6] 지역별 혼합반 교(직)원 현황(명)

- 5) 유아, 부모, 할머니 3세대가 함께 아이를 돌봐주는 이미지로 육아경험이 풍부한 40~60대 중고령 여성이 중일제 유치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는 유급자원봉사인력을 의미함.
- 6) 특정 분야에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유치원 기본 운영을 보조 지원하는 중고령층 중심으로 소정의 유아교육 보수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의미함.

3) 유아정원수

혼합반 유치원의 총 정원수는 평균 21.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별로는 공립이 평균 20.80명으로 사립의 51.0명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전체 평균 21.21명보다도 적었다. 학급수별로는 1개 학급의 정원수는 평균 약 15.8명, 2개 이상 학급의 정원수는 평균 40.6명으로 보고되었다. 전체 평균보다 정원수가 많은 지역은 서울 57.89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울산/남 24.7명, 대전/충청 23.42명 순으로 나왔다. 이에 비해 강원 15.26명, 제주 16.31명, 대구/경북 16.30명, 광주/전라 16.69명으로 대체로 혼합반이 많은 지역은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

〈표 8〉 혼합반 유치원 정원수

단위: %,명

구분	10명 미만	10~20명 미만	20~30명 미만	30명 이상	모름	평균
전 체	18.4	33.8	30.2	16.9	0.8	21.21
설립						
공립	18.6	34.0	30.6	16.0	0.8	20.80
사립	.0	14.3	.0	85.7	.0	51.00
지역						
서울	.0	2.7	2.7	94.6	.0	57.89
인천/경기	9.5	24.1	51.8	14.5	.0	21.38
대전/충청	11.8	21.7	47.2	17.4	1.9	23.42
광주/전라	23.1	52.0	15.8	6.8	2.3	16.69
대구/경북	37.7	36.0	12.3	14.0	.0	16.30
부산/울산/경남	11.2	26.3	38.8	23.7	.0	24.78
강원	29.6	52.3	8.6	7.4	.0	15.26
제주	29.6	40.7	14.8	14.8	.0	16.31
학급수						
1개	23.3	41.6	33.5	.7	.9	15.76
2개 이상	.9	5.7	18.4	74.6	.4	40.55

4) 유아재원아수

혼합반의 재원아수는 평균 18.53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총 정원수 21.21명보다 2.68명 적은 수치이다. 즉, 혼합반은 정원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원아수를 연령별로 보면 만 3세 3.05명, 만 4세 6.06명, 만 5세 9.42명으로 연령이 많아 질수록 재원아수도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5.54명으로 재원아수가 가장 많았고, 이에 비해 강원은 13.46명으로 재원아수가 가장 적었다. 총 정원수와 재원아수의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은 대전/충청지역으로 5.27명이고, 차이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지

역으로 0.18명이었다. 설립별로는 공립유치원은 18.13명, 사립유치원은 48.0명으로 사립유치원의 재원이수가 훨씬 적었다. 그러나 정원수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은 공사립을 불문하고 동일하다. 학급수별로는 1개 학급의 재원이수는 평균 약 13명, 2개 이상 학급의 재원이수는 평균 약 39명이며 1개 학급의 유아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만 3세 2.4명, 만 4세 4.2명, 만 5세 6.3명으로 전체 평균보다 적었다.

〈표 9〉 소인수 혼합반 유치원의 재원이수

구분	단위: 명			
	만 3세	만 4세	만 5세	평균
전 체	3.05	6.06	9.42	18.53
설립별				
공립	2.90	5.91	9.31	18.13
사립	14.00	16.79	17.21	48.00
지역				
서울	6.46	21.11	27.97	55.54
인천/경기	2.19	6.52	10.00	18.71
대전/충청	3.63	5.41	9.11	18.15
광주/전라	3.46	4.64	6.01	14.11
대구/경북	2.07	4.71	8.53	15.31
부산/울산/경남	3.44	6.90	11.72	22.06
강원	3.01	4.69	5.75	13.46
제주	1.83	4.19	10.11	16.13
학급수				
1개	2.38	4.21	6.29	12.87
2개 이상	5.46	12.66	20.57	38.68

다. 소인수 혼합반 유치원 운영실태

1) 혼합반 운영 이유

만 5세를 혼합반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근 지역에 유아수가 적어서 만 5세만으로 충원하기 어려워서'가 81.4%로 월등히 많이 응답하였다. 그러나 설립별로는 명확한 차이를 보였는데, 사립유치원은 '인가받은 학급수가 부족해서'가 42.9%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인근 지역에 유아수가 적어서 만 5세만으로 충원하기 어려워서'는 28.6%가 응답해 2순위를 차지하였다.

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서울에서 '인가받은 학급수가 부족해서'를 응답한 경우가 40.5%로 다른 지역에 비해 확연히 많았다. 사립유치원이 많은 서울은 혼합반 운영 이유가 다른 지역과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서울 외의 나머지 7개 지역은 대부분 '인근 지역에 유아수가 적어서 만 5세만으로 충원하기 어려워서',

‘만3세아 또는 만4세아의 부모가 재원을 원해서’, ‘인간받은 학급수가 적어서’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급수별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1개 학급을 운영하는 유치원은 유아의 인구수가 적은 게 혼합반 운영의 가장 큰 이유이지만, 2개 이상 학급을 운영하는 유치원은 이유가 분산되었다.

〈표 10〉 혼합반 운영 이유

단위: %(명)

구분	인근 유아 인구 적어 만5세 만으로 충원 어려움	만3세나 만4세 부모가 재원 원함	인간 받은 학급수 부족	교사 인력 부족	기 타	모름/ 무응답	계
전체	81.4	11.1	5.3	0.4	1.4	0.4	100.0(1,040)
설립별							
공립	82.2	11.1	4.8	.4	1.2	.4	100.0(1,026)
사립	28.6	7.1	42.9	.0	21.4	.0	100.0(14)
	$\chi^2(df)=82.35(5)^{***}$						
지역							
서울	18.9	27.0	40.5	.0	8.1	5.4	100.0(37)
인천/경기	85.5	7.7	4.5	1.4	.5	.5	100.0(220)
대전/충청	76.4	12.4	6.8	.0	3.7	.6	100.0(161)
광주/전라	84.2	13.1	2.7	.0	.0	.0	100.0(221)
대구/경북	89.5	4.4	2.6	.0	3.5	.0	100.0(114)
부산/울산/경남	84.2	11.2	3.9	.0	.7	.0	100.0(152)
강원	84.0	11.1	3.7	1.2	.0	.0	100.0(81)
제주	83.3	14.8	1.9	.0	.0	.0	100.0(54)
	$\chi^2(df)=196.09(35)^{***}$						
학급수							
1개	88.1	8.3	2.6	.2	.6	.2	100.0(812)
2개 이상	57.9	21.1	14.9	.9	4.4	.9	100.0(228)
	$\chi^2(df)=118.63(5)^{***}$						

* p < .05, *** p < .001.

학급수가 2개 이상인데 기본교육과정시간대에 혼합반을 운영하는 경우는 기관의 교육철학으로 인해, 특수반을 1개 운영해서, 만 5세아가 많아서 만 4세아와 혼합하는 등 이유는 다양했다.

2) 혼합반 수업 운영 방식

혼합반에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특정연령에 치중하지 않고 골고루 수업시간을 안배한다’ 30.7%, ‘수업내용에 따라 다르다’ 28.3%, ‘만 5세아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한다’ 22.0% 순으로 각 항목에 비교적 골고루 응답하였다.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서울이 '특정연령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시간을 안배함'이 62.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강원도와 대전/충청은 '수업내용에 따라 다름'이 각각 45.7%, 44.1%로 가장 많았으며 제주와 부산/울산/경남은 '만5세아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함'이 각각 48.1%, 35.5%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교사경력이 많을수록 특정연령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시간을 안배해서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혼합반 수업 운영 방식

단위: %(명)

구분	특정연령 치중않고 골고루 수업시간 안배	수업 내용에 따라 다름	만5세아 중심 수업운영	원아수 많은 연령 중심 수업운영	만4세아 중심 수업운영	만3세아 중심 수업운영	기타	계
전 체	30.7	28.3	22.0	10.4	7.0	0.4	1.3	100.0(1,040)
설립별								
공립	30.1	28.5	22.3	10.4	7.0	.4	1.3	100.0(1,026)
사립	71.4	14.3	.0	7.1	7.1	.0	.0	100.0(14)
				$\chi^2(df)=12.17(6)$				
지역								
서울	62.2	27.0	2.7	5.4	2.7	.0	.0	100.0(37)
인천/경기	26.8	18.2	25.9	18.2	10.5	.5	.0	100.0(220)
대전/충청	23.6	44.1	13.7	8.1	5.6	.6	4.3	100.0(161)
광주/전라	37.1	33.0	14.9	8.6	5.9	.5	.0	100.0(221)
대구/경북	33.3	30.7	21.9	5.3	4.4	.9	3.5	100.0(114)
부산/울산/경남	27.6	14.5	35.5	12.5	8.6	.0	1.3	100.0(152)
강원	27.2	45.7	13.6	3.7	9.9	.0	.0	100.0(81)
제주	27.8	11.1	48.1	11.1	1.9	.0	.0	100.0(54)
				$\chi^2(df)=177.91(42)***$				
교사경력별								
10년 미만	30.1	30.1	15.4	12.2	10.7	.6	.9	100.0(345)
10~20년 미만	32.2	30.4	17.6	12.3	6.6	.0	.9	100.0(227)
20~30년 미만	29.7	26.5	29.2	8.1	4.7	.2	1.6	100.0(445)
30년 이상	43.5	13.0	26.1	8.7	.0	4.3	4.3	100.0(23)
				$\chi^2(df)=53.98(18)***$				
교사학력별								
전문대졸	34.5	22.7	26.1	11.8	4.2	.0	.8	100.0(119)
대졸	30.6	28.1	20.2	11.6	8.2	.6	.8	100.0(526)
대학원졸	29.6	30.1	23.3	8.4	6.3	.3	2.0	100.0(395)
				$\chi^2(df)=13.82(12)$				
학급 수								
1개	30.9	28.2	23.4	9.0	6.7	.4	1.5	100.0(812)
2개 이상	29.8	28.5	17.1	15.4	8.3	.4	.4	100.0(228)
				$\chi^2(df)=12.49(6)$				

*** p < .001.

3) 혼합반 수업 운영의 어려운 점

혼합반으로 수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연령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을 실시하지 못함'이 50.8%로 가장 많이 꼽았다. '발달단계가 달라서 교육을 제대로 하기 못함'을 27.5%가 응답하여 2순위를 차지했다. '교사의 휴식시간이 거의 없음'이 9.2%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서 혼합반 운영의 가장 어려운 점은 수업과 관련된 것으로, 혼합반이란 환경으로 인해 양질의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하는 점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

설립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공립과 사립유치원의 어려운 점 1순위는 '유아의 연령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을 실시하지 못함'으로 동일하지만 응답 비율에서 공립이 50.9%로 사립 42.9%보다 높았다. 2순위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국공립은 전체와 동일하게 '발달단계가 달라서 교육을 제대로 하기 못함'이 27.9%로 나온 반면, 사립유치원은 '발달단계가 달라서 교육을 제대로 하기 못함'을 응답한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

지역별로는 '유아의 연령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을 실시하지 못함' 항목에서 서울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응답하기는 했지만 비율에서 전체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29.7%를 차지하였다. 이 항목은 제주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63.0%).

〈표 12〉 혼합반 운영의 어려운 점

단위: %(명)

구분	유아연령 따른 수준별 교육 과정 실시 못함	유아 발달 단계 달라서 제대로 교육하기 어려움	교사의 휴식 시간이 거의 없음	유아 개개인을 세심하게 돌보지 못함	그다지 어려움을 느끼지 못함	기타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50.8	27.5	9.2	6.0	5.9	0.6	0.1	100.0(1,040)
설립별								
공립	50.9	27.9	9.2	5.8	5.6	.6	.1	100.0(1,026)
사립	42.9	.0	14.3	14.3	28.6	.0	.0	100.0(14)
	$\chi^2(df)=18.69(6)**$							
지역								
서울	29.7	24.3	13.5	10.8	18.9	2.7	.0	100.0(37)
인천/경기	53.6	30.5	9.1	3.6	3.2	.0	.0	100.0(220)
대전/충청	42.2	34.2	14.9	3.7	5.0	.0	.0	100.0(161)
광주/전라	45.7	27.6	9.0	9.0	7.7	.5	.5	100.0(221)
대구/경북	64.0	21.1	.0	4.4	7.0	3.5	.0	100.0(114)

(표 12 계속)

부산/울산/경남	53.9	25.0	10.5	5.9	4.6	.0	.0	100.0(152)
강원	50.6	24.7	12.3	8.6	3.7	.0	.0	100.0(81)
제주	63.0	22.2	1.9	5.6	7.4	.0	.0	100.0(54)
	$\chi^2(df)=94.10(42)^{***}$							
교사경력별								
10년 미만	52.2	29.0	5.5	7.0	5.5	.9	.0	100.0(345)
10~20년 미만	49.8	31.7	7.9	4.0	6.2	.4	.0	100.0(227)
20~30년 미만	50.1	24.7	13.0	5.8	5.8	.2	.2	100.0(445)
30년 이상	52.2	17.4	4.3	13.0	8.7	4.3	.0	100.0(23)
	$\chi^2(df)=30.25(18)^*$							
교사학력별								
전문대졸	52.1	27.7	7.6	5.0	7.6	.0	.0	100.0(119)
대졸	50.0	27.8	8.9	6.7	5.7	.8	.2	100.0(526)
대학원졸	51.4	27.1	10.1	5.3	5.6	.5	.0	100.0(395)
	$\chi^2(df)=4.46(12)$							
학급 수								
1개	51.4	27.1	10.0	4.9	5.8	.7	.1	100.0(812)
2개 이상	48.7	28.9	6.6	9.6	6.1	.0	.0	100.0(228)
	$\chi^2(df)=11.36(6)$							

* $p < .05$, ** $p < .01$, *** $p < .001$.

라. 5세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혼합반 의견

1) 혼합반에서 5세 누리과정 운영 가능성

현재 혼합반 환경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5세 누리과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가능하지 않다'가 66.9%, '가능하다'가 26.6%로 부정적인 응답이 훨씬 더 많았다. 국공립이 사립보다 부정적 응답이 조금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75.9%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51.4%로 가장 낮았다. 이는 거꾸로 '가능하다'는 지역별 차이에서도 동일하였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지역은 대체로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게 나와서 현재 혼합반 상황에서 5세 누리과정의 운영은 다수가 회의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13〉 혼합반에서 5세 누리과정 운영 가능여부

구분	그렇다	아니다	모름/무응답	계
전체	26.6	66.9	6.4	100.0(1,040)
설립				
공립	26.5	67.1	6.4	100.0(1,026)
사립	35.7	57.1	7.1	100.0(14)
	$\chi^2(df)=.065(2)$			

(표 13 계속)

지역				
서울	35.1	51.4	13.5	100.0(37)
인천/경기	24.1	69.1	6.8	100.0(220)
대전/충청	32.3	65.8	1.9	100.0(161)
광주/전라	29.0	65.2	5.9	100.0(221)
대구/경북	15.8	69.3	14.9	100.0(114)
부산/울산/경남	30.9	63.8	5.3	100.0(152)
강원	25.9	71.6	2.5	100.0(81)
제주	16.7	75.9	7.4	100.0(54)
$\chi^2(df)=38.25(14)^{***}$				
교사경력별				
10년 미만	23.5	71.3	5.2	100.0(345)
10~20년 미만	26.4	67.4	6.2	100.0(227)
20~30년 미만	29.0	63.8	7.2	100.0(445)
30년 이상	30.4	56.5	13.0	100.0(23)
$\chi^2(df)=7.13(6)$				
교사학력별				
전문대졸	35.3	58.0	6.7	100.0(119)
대졸	24.3	70.9	4.8	100.0(526)
대학원졸	27.1	64.3	8.6	100.0(395)
$\chi^2(df)=12.72(4)^*$				
학급수				
1개	28.1	65.6	6.3	100.0(812)
2개 이상	21.5	71.5	7.0	100.0(228)
$\chi^2(df)=3.96(2)$				

* $p < .05$, *** $p < .001$.

혼합반에서 5세 누리과정 실행이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에 그 이유를 묻은 결과, '원아 연령이 혼재되어 있어서'가 53.0%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연령별 수업을 위한 지원 인력이 없어서' 28.7%, '수업활동 공간이 독립되어 있지 않아서' 8.0%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3개(또는 2개) 연령이 혼재되어 있는데 담당교사가 평균 1.26명(그림 5 참조) 상황에서 '5세 누리과정'을 1인 교사가 내실있게 운영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혼합반에서 5세 누리과정 운영의 어려운 점으로 교실공간이나, 교재·교구와 같은 물리적 환경은 인력 부족에 비해 큰 어려운 점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별로는 공립이 사립보다 물리적 환경(독립된 수업공간, 교재·교구)의 어려운 점을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사립은 이 부분에서는 응답한 사례가 없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와는 다르게 '연령별 수업을 위한 지원인력이 없어서'가 42.1%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나머지 7개 지역은 '원아 연령이 혼재되어 있어서'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표 14〉 혼합반에서 5세 누리과정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원아 연령이 혼재되어 있어서	연령별 수업 위한 지원 인력이 없어서	수업활동 공간이 독립되어 있지 않아서	교재·교구 등을 다른 연령대와 같이 써야 하므로	기타	계
전 체	53.0	28.7	8.0	6.8	3.4	100.0(696)
설립별						
공립	52.9	28.6	8.1	6.8	3.5	100.0(688)
사립	62.9	37.5	.0	.0	.0	100.0(8)
$\chi^2(df)=1.83(4)$						
지역						
서울	36.8	42.1	5.3	15.8	.0	100.0(19)
인천/경기	63.2	22.4	8.6	5.3	.7	100.0(152)
대전/충청	54.7	36.8	3.8	2.8	1.9	100.0(106)
광주/전라	50.7	31.3	8.3	9.7	.0	100.0(144)
대구/경북	53.2	12.7	7.6	10.1	16.5	100.0(79)
부산/울산/경남	48.5	30.9	8.2	5.2	7.2	100.0(97)
강원	46.6	36.2	10.3	6.9	.0	100.0(58)
제주	46.3	31.7	14.6	4.9	2.4	100.0(41)
$\chi^2(df)=88.79(28)^{***}$						
교사경력별						
10년 미만	56.9	27.6	6.9	7.7	.8	100.0(246)
10~20년 미만	52.9	30.1	7.2	5.9	3.9	100.0(153)
20~30년 미만	49.6	29.6	9.5	6.7	4.6	100.0(264)
30년 이상	53.8	15.4	7.7	.0	23.1	100.0(13)
$\chi^2(df)=25.70(12)^*$						
교사학력별						
전문대졸	47.8	29.0	11.6	7.2	4.3	100.0(69)
대졸	55.8	24.1	9.1	8.0	2.9	100.0(373)
대학원졸	50.4	35.4	5.5	4.7	3.9	100.0(254)
$\chi^2(df)=14.67(8)$						
학급 수						
1개	56.1	27.8	7.7	5.3	3.2	100.0(533)
2개 이상	42.9	31.9	9.2	11.7	4.3	100.0(163)
$\chi^2(df)=13.19(4)^*$						

* $p < .05$, *** $p < .001$.

혼합반에서 5세 누리과정이 가능하고 응답한 277명에게 가능한 이유를 별도로 알아보았다. 결과, '지금까지 혼합반에서도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했기 때문에'라고 응답이 59.6%로 가장 많았고, '혼합반에서도 만5세아 위주로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가 26.7%를 차지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대전/충청, 광주/전라 지역에서 ‘지금까지 혼합반에서도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했기 때문에’이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왔으며 제주, 부산/울산/경남, 인천/경기가 ‘혼합반에서도 만5세아 위주로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5〉 혼합반에서 5세 누리과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지금까지 혼합반에서도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했음	혼합반도 만5세아 위주로 수업을 진행했음	내년에는 만 5세아 만으로 충원되므로	수업을 지원해 줄 다른 인력이 있어서	기타	계
전체	59.6	26.7	5.1	4.0	4.7	100.0(277)
설립별						
국공립	59.2	27.2	5.1	3.7	4.8	100.0(272)
사립	80.0	.0	.0	20.0	.0	100.0(5)
	$\chi^2(df)=5.51(4)$					
지역						
서울	76.9	7.7	.0	7.7	7.7	100.0(13)
인천/경기	54.7	35.8	5.7	1.9	1.9	100.0(53)
대전/충청	73.1	15.4	5.8	5.8	.0	100.0(52)
광주/전라	65.6	23.4	3.1	4.7	3.1	100.0(64)
대구/경북	44.4	11.1	.0	.0	44.4	100.0(18)
부산/울산/경남	53.2	42.6	4.3	.0	.0	100.0(47)
강원	42.9	23.8	19.0	14.3	.0	100.0(21)
제주	44.4	44.4	.0	.0	11.1	100.0(9)
	$\chi^2(df)=107.93(28)***$					
교사경력별						
10년 미만	63.0	19.8	4.9	4.9	7.4	100.0(81)
10~20년 미만	73.3	21.7	1.7	3.3	.0	100.0(60)
20~30년 미만	51.9	34.1	6.2	3.9	3.9	100.0(129)
30년 이상	42.9	14.3	14.3	.0	28.6	100.0(7)
	$\chi^2(df)=24.93(12)*$					
교사학력별						
전문대졸	54.8	35.7	2.4	2.4	4.8	100.0(42)
대졸	62.5	22.7	3.9	4.7	6.3	100.0(128)
대학원졸	57.9	28.0	7.5	3.7	2.8	100.0(107)
	$\chi^2(df)=6.62(8)$					
학급 수						
1개	63.6	26.3	1.8	3.9	4.4	100.0(228)
2개 이상	40.8	28.6	20.4	4.1	6.1	100.0(49)
	$\chi^2(df)=31.62(4)***$					

* p < .05, *** p < .001.

2) 혼합반에서 5세 누리과정 운영시 바람직한 방법

혼합반에서 5세 누리과정의 실시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보였지만, 실시를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몇 가지 항목을 제시하여 의견을 알아보았다. 결과, '혼합반에서 만 5세아를 분리하여 담당교사가 교육하고, 만 3·4세아를 위해 별도의 교사(인력)를 지원받아서 교육한다'(첫번째 방안)가 68.4%로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현재와 동일하게 교육해도 무방하다'(두번째 방안)를 20.4%가 응답하여 2순위를 차지했다. '인근 유치원의 만 5세아만 또는 만 3·4세아를 분리해서 한 유치원에 모아서 교육한다'(세번째 방안)는 8.8%에 그쳤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첫 번째 방안을 1순위로 응답한 가운데 응답비율에서는 제주 83.3%로 가장 높았다. 강원 75.3%, 인천/경기 73.2%, 대전/충청 70.2%, 광주/전라 69.7% 순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서울,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은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그러나 서울과는 달리,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세 번째 방안을 응답한 경우가 각각 10.5%, 9.9%로 보고되었다. 두 번째 방안을 가장 많이 응답한 지역은 서울로 48.6%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1개 학급의 유치원에서 세 번째 방안을, 2개 학급 이상 유치원은 두 번째 방안을 응답한 경우가 각각 9.5%, 22.4%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표 16〉 5세 누리과정 운영시 가장 바람직한 방법

단위: %(명)

구분	혼합반에서 만5세아 분리해 담당교사가 교육하고, 만3,4세아 위해 별도 교사(인력) 지원받아 교육	현재와 동일하게 교육해도 무방	인근 유치원 만5세만 또는 만3,4세를 분리해서 한 유치원에 모아서 교육	기타	모름/무응답	계
전 체	68.4	20.4	8.8	2.0	0.5	100.0(1,040)
설립별						
공립	68.5	20.1	8.9	2.0	.5	100.0(1,026)
사립	57.1	42.9	.0	.0	.0	100.0(14)
	$\chi^2(df=5.37(4))$					
지역						
서울	51.4	48.6	.0	.0	.0	100.0(37)
인천/경기	73.2	16.8	7.3	.9	1.8	100.0(220)
대전/충청	70.2	18.6	11.2	.0	.0	100.0(161)
광주/전라	69.7	21.7	7.2	.9	.5	100.0(221)
대구/경북	52.6	23.7	10.5	13.2	.0	100.0(114)

(표 16 계속)

부산/울산/경남	64.5	24.3	9.9	1.3	.0	100.0(152)
강원	75.3	12.3	12.3	.0	.0	100.0(81)
제주	83.3	9.3	7.4	.0	.0	100.0(54)
$\chi^2(df)=131.48(28)$						
교사경력별						
10년 미만	69.6	18.8	9.0	1.7	.9	100.0(345)
10~20년 미만	71.4	18.9	7.5	1.8	.4	100.0(227)
20~30년 미만	66.1	21.8	9.7	2.2	.2	100.0(445)
30년 이상	65.2	30.4	.0	4.3	.0	100.0(23)
$\chi^2(df)=8.58(12)$						
교사학력별						
전문대졸	64.7	21.8	12.6	.8	.0	100.0(119)
대졸	68.3	20.7	8.7	1.5	.8	100.0(526)
대학원졸	69.6	19.5	7.6	3.0	.3	100.0(395)
$\chi^2(df)=8.61(8)$						
학급수						
1개	68.0	19.8	9.5	2.3	.4	100.0(812)
2개 이상	69.7	22.4	6.1	.9	.9	100.0(228)
$\chi^2(df)=5.76(4)$						

4. 맺음말: 유치원 혼합반을 위한 정책적 제언

지금까지 혼합반 유치원의 일반 현황과 운영실태를 살펴보았는데, 정책적 제언을 끝으로 줄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읍면도서 지역의 1개 학급 혼합반의 정책적 제언에 한정하여 논의하겠다.

가. 혼합반용 누리과정 운영 매뉴얼을 개발·보급한다.

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5세 누리과정을 현재 혼합반에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대다수 교사가 응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세 누리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3, 4세 누리과정이 보급될 계획이다. 수준별 유치원교육과정에서 연령별 편성을 전제로 교육·보육과정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혼합반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연령별 편성을 하는 게 정답이지만, 적은 유아인구수가 혼합반 운영의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다.

우선은 혼합반용 운영매뉴얼(또는 혼합반용 유치원 지도서)를 개발·보급하여 교사가 현 체제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겠다.

나. 일정규모가 되는 만 5세반은 별도로 운영하고 교사를 추가 배치한다.

혼합반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현재 혼합반을 만 5세아를 만 3, 4세아와 분리하여 5

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첫 번째 방안을 가장 많이 지지하였다. 이럴 때에는 만 3, 4세 반을 담당할 교사가 추가로 지원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력지원 역시, 현실적으로 실시하기란 쉽지 않다. 교사지원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요원한 일만은 아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 3항에는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각 학급 담당 교사 외에 종일제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시도교육청에 여건에 따라(예: 예산범위내에서) 정교사 외의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제정(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5호 신설)됨에 따라 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합반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지역에 유아 인구수가 적어서’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다. 인구는 모든 정책의 기반이 된다. 유아인구수가 적은 지역의 혼합반에 5세 누리과정을 위해 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경우 교사를 추가 배치할 때는 “만 5세아의 재원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라는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일정규모란 지역의 사정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본 설문조사 결과에서 혼합반의 만 5세아가 평균 9.42명으로 나온 점을 감안해서 ‘10명 이상’으로 제시해 본다.

다. 중장기적으로 혼합반은 통합·운영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겠다.

혼합반은 대부분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주를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정책과 맞물려 추진될 수 밖에 없다. 현재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정책은 “1면 1교”이다(이혜영, 2010). 이러한 초등학교 통폐합 정책에 따라 병설유치원도 점차 통폐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까지 농산어촌 지역의 322개 병설유치원을 112개로 통합 운영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취학 직전의 만 5세아는 일정 규모의 유치원에서 또래들과 함께 교육받는 것이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본 연구의 혼합반 교사 면담조사에서 많이 나왔다. 이에 2010년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효과 분석」과 같이 소인수 혼합반 유치원의 통폐합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라. 통합 된 혼합반 유치원들 간 등거리 또는 적절한 위치에 공립단설 유치원이 설립되어야 할 것이며 여건상 어려운 지역에는 협력네트워크 사업이 활성화하여 거점유치원이 공립단설유치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혼합반 유치원은 중장기적으로 소규모 학급의 통폐합 정책과 맞물려가야 하는 청사진 속에서 혼합반 유치원을 정리, 통합 운영하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혼합반 유치원들을 공립병설유치원 형태로 통합해 나갈 것인지, 공립단설유치원 형태로 통합해 나갈 것인지를 정책의 초기단계부터 확정해서 추진해야 하겠다. 지역적 특성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초등학교 내의 병설유치원보다는 일정 규모를 갖춘 단설유치원의 확대가 더 바람직하다는 사실은 대부분 동감하는 부분이다. 병설유치원은 여건상 일정 규모이상의 시설·설비를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되 그 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존의 병설유치원을 통합하면서 설립되는 단설유치원은 인근 유아들의 접근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위치에 설립되어야 하겠다. 설문결과에서는 세 번째 방안을 실시하는 경우에 가장 적합한 유치원으로 등거리 유치원을 가장 많이 꼽았다는 사실을 염두해야 하겠다. 따라서 앞서 제안한 지정유치원을 선정할 때—지정유치원이 거점유치원이 아닌 경우—향후 단설유치원의 설립을 염두하여 신중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다.

마. 유아수 대비 유치원·어린이집 기관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연령별 이원화 또는 학군제 실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혼합반이 많은 읍면도서 지역은 기본적으로 취원아수가 적는데, 어린이집으로 분산되다 보니, 혼합반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 본고에는 실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만 5세아가 적은 농산어촌 지역에 초등학교처럼 학군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면담이나 설문조사에서 제기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인근의 어린이집과 협의하여 연령별 이원화를 실제 하는 사례도 있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많은 공적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데, 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그리고 두 기관의 상생을 위해서 유아수가 적은 지역은 연령별 이원화나 학군제 실시 등을 기관차원이나 지역청 차원에서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2009).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0호.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 고시(5세 누리과정 고관련)

국무총리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5. 2). “만5세 어린이 교육·보육, 국가가 책임진다”

- 김경화·서영숙(2006). 유아교육기관에서 혼합연령집단 구성에 대한 재인식 모색. 한국보육학회지6(2). 179-192.
- 김명순·유정은·이민주·조항린(2011). 혼합연령과 동일연령 학급 구성 및 놀이성에 따른 유아의 놀이행동. 열린유아교육연구16(1). 455-471.
- 김은설·문무경·최윤경·김경미(2010). 2009·2010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청·충청남도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 박미숙(1996). 유아교육 공교육화 발달과정에 관한 고찰. 경기교육논총(5). 219-256.
- 보건복지부. 2010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06호. 5세 누리과정의 영역 및 구체적 내용
- 서울특별시교육청(2010). 2010 지역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 운영 계획
- 신은수(1996). 혼합연령집단과 동일연령 집단 유아의 사회인지적 능력 비교분석에 기초한 혼합연령 집단 학급의 교수방법 모색을 위한 연구. 유아교육연구16(1). 139-155.
- 유희정(2005). 효율적인 혼합연령학급 운영을 위한 구성원 간 상호작용과정 분석. 유아교육학논집9(2). 189-211.
- 이명환(2005). 독일 유아교육기관의 혼합연령집단 구성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10(1), 1-19.
- 이혜영·김지하·마상진·문혜림(2010).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효과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장명림·김은설·최혜선(2010). 유아교육 지원기관 협력네트워크 운영. 경기도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 정혜순(2008). 한국국공립유치원의 변천과정.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 교육통계서비스 사이트 <http://cesi.kedi.re.kr>
- 통계청 사이트: <http://kostat.go.kr>